

| 5일 Market Index     |                    |
|---------------------|--------------------|
| 코스피                 | 코스닥                |
| 2649.40<br>(-24.87) | 866.37<br>(-6.60)  |
| 금리 (연율)             | 환율 (원/달러)          |
| 3.349<br>(-0.011)   | 1334.50<br>(+3.20) |

의료계 집단행동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02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가격이 송출되고 있다. 비트코인 판매가격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최고가 9686만원을 터치했다. /뉴시스

## “국가장학금 150만명 혜택 근로장학금도 20만명까지”

尹대통령, 열일곱번째 민생토론회  
교육·근로·주거장학금 3종 패키지  
“청년 역량 발휘 돕는게 국가 책무”



윤석열대통령(사진)이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가장학금제도 확대 등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려갈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 양육자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신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社告

- 4·10 제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메트로경제신문>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총선 특별취재팀을 운영합니다. 투표일까지 메트로경제신문 특별취재팀 기자들은 전국 총선현장을 돌며 생생한 선거 현장과 각 정당의 정책들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입니다.
- ◆제22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낙동강 벨트 및 전국의 생생한 선거 현장을 인턴취, 취재·보도합니다.
- ◆각 정당 유세·홍보 기초 분석 비교

- 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선거 기초를 전달합니다.
- ◆챗GPT 활용한 22대 총선 정당 공약 분야별 검증
  - 각 정당의 공동공약을 비롯해 공약 평가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 ◆매주 1회 여론조사 및 평론가 분석
  - 격전지 중심으로 여론조사의 분석과 박상병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등 평론가들의 해설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습니다.

## 논란 임원 앓히고 상생도 제자리

# 여론만 잠재운 카카오의 ‘쇄신’

신임 CTO에 정규돈 前카뱅 CTO  
카뱅 먹튀 논란에도 임원 내세워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檢 고발  
택시업계와 상생합의안 갈등도



카카오가 대규모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빚은 인물을 새 임원으로 내세운 데 이어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내용에 휩싸이며 쇄신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 차익을 챙기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내정했기 때문.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금감원으로 부터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데 이어 택시업계와 상생합의안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내정자)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최근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카카오의 차기 카카오톡 CTO로 소개했다.

재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카카오의 서비스 및 기술을 이해하고 제1금융권의 기술안정성 수준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리더를 내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돈 전 CTO 내정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가 기술경쟁력을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 CTO 내정자는 과거 스톡옵션 관련 70억원 차익을 얻으면 ‘먹튀논란’이 있었던 임원이기 때문.

정당한 지 3거래일 만인 2021년 8월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가운데 10만6000주(주당 6만2336원)를 매도해 약 6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는 2주 뒤 나머지 주식 1만1234주(주당 9만1636원)도 전량 매도해 10억여원을 얻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내부 상황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받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택시업계와 상생합의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통지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이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생산가능인구 비중 33년 만에 70% 하회

15~64세 인구 비중 69.9%  
고령화에 출산율 하락 등 영향

지난달 국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7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란 15~64세의 나이에 속해 정상적인 노동 참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의 감소는 나라 성장률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은 지난 1991년 69.7%를 기록한 뒤 1992년(70.0%)에 역대 처음으로 70% 선을 넘겼다. 그 이후 2010년대 들어 73%대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 비중은 2011년 10월~2012년 1월 기간에 73.4%까지 치솟았으나 증가세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에 73.2%로 주춤한 뒤 2019년 2월에는 72.4%까지 축소됐다. 이후 2020년 2월(71.9%), 2021년 2월(71.3%), 2022년 2월(70.9%), 2023년 2월(70.4%) 등으로 매해 0.4~0.5%p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15~64세 인구 비중은 69.9%로, 전월(70.0%) 대비 0.1%포인트(p) 내려갔다. 전년동월(70.4%)에 비해서는 0.5%p 낮아졌다.

이 같은 비중 하락 추세는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총 인구 감소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0% 선을 밑돈 것은 지난 1991년 이래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들 연령대 비중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9년 2월 기준 전체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510만 명)에 그쳤

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년 2월 630만 명(2009년 대비 +120만 명)까지 증가했고 비중도 12.3%까지 늘었다.

다시 5년이 지난 2019년 2월에는 노인인구가 771만 명(14.9%)에 달했다. 2024년 2월 기준 노인인구와 비중은 981만 명, 19.1%로 각각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령층은 불과 15년 만에 470만 명 넘게 증가한 데다 비율도 9%p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 15년간 총 인구는 172만 명 느는 데 그쳤다. 총 인구는 2009년 2월(4957만 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1월(5185만 명)에 정점을 찍고 올해 2월 5130만 명까지 감소했다.

OECD의 2022년 집계 기준, 38개 회원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평균치는 64.8%였다. 당시 71.0%(1위)였던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내려앉은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국민의힘, 박성중·안병길 컷오프... 김영주·박민식 공천
- ▲ 윤재옥 “김혜경 보좌 권한업 공천, ‘위인설천’... 합리성 없어” /사진 뉴시스

- ▲ ‘공천배제’ 기동민, “무죄 증명해 성복으로 돌아오겠다”
- ▲ 국민통합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 양극화 해소”



- ▲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수사 방해·외압... 매우 파렴치” /사진 뉴시스
- ▲ 김용태 “고양정 집값 화끈하게 올릴 것”... ‘공천 취소’ 김현아, 선대위원장 맡기로